

해외동향

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, 인구감소·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언

출처 : 内閣官房, 2022,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.
 참고문헌 : 최해옥, 2022. 경제안보를 위한 일본의 전략기술 확보전략 및 시사점, STEPI Insight 30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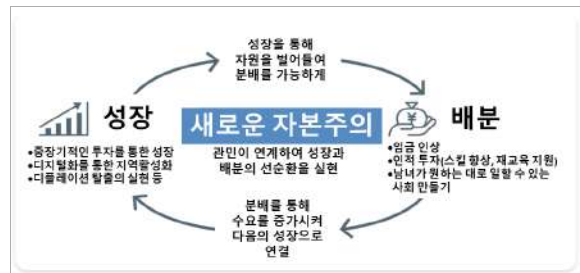
인구감소와 지방소멸대응, 기사다정부의 성장과 분배전략 추진

- 「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」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
- 기사다총리는 '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화' 실현을 위해 '디지털추진위원'을 임명하고 있으며, 추진위원은 본인이나 소속 기업·단체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해 디지털상이 임명하는 구조(무급으로 임기는 1년, 원칙 자동 갱신)
- 재택근무, 원격 교육·원격 의료 등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개성을 살리면서 지역이 당면한 사회과제를 해결하고, 매력을 향상시켜 지역 활성화 가속화
- [참고] 기사다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「새로운 자본주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계획」의 주요 골자인 성장과 분배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성장전략: ①과학기술·이노베이션, ②디지털전원도시국가 구상 등에 의한 지역 활성화, ③탄소중립 실현, ④경제안전보장
 - 분배전략: ①소득향상으로 연결되는 "임금인상", ②인력투자의 근본 강화, ③미래를 담당하는 차세대 "중산층 유지"

성숙도별 유형 구분을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

- 지역비전(스마트시티·슈퍼시티, 산학관 협창(協創)도시, SDGS 미래도시, 저탄소 선행지역, MaaS실장(実装)지역)의 실현을 위해 종합적 지원 실시
 - [성숙도별 유형구분] 성숙도에 따라 3가지 유형(스타터형, 플레이어형, 리더형)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
- *단, 성숙도 평가를 위한 공통요건 존재(공조, 디지털원칙, 개방기반)
- [유형별 교부기준 상이] 디지털전원도시 국가 실현단계를 성숙도 유형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type1(국비 상한 1억엔, 1/2보조율), type2(국비 상한 2억엔, 1/2보조율), type3(국비 상한 6억엔, 2/3보조율)

[기사다정권의 "새로운 자본주의" 모습]



출처 : 政府広報オンライン(2022)을 참고한 최해옥(2022) P.26

수요자 중심의 증거기반의 정책추진(EBP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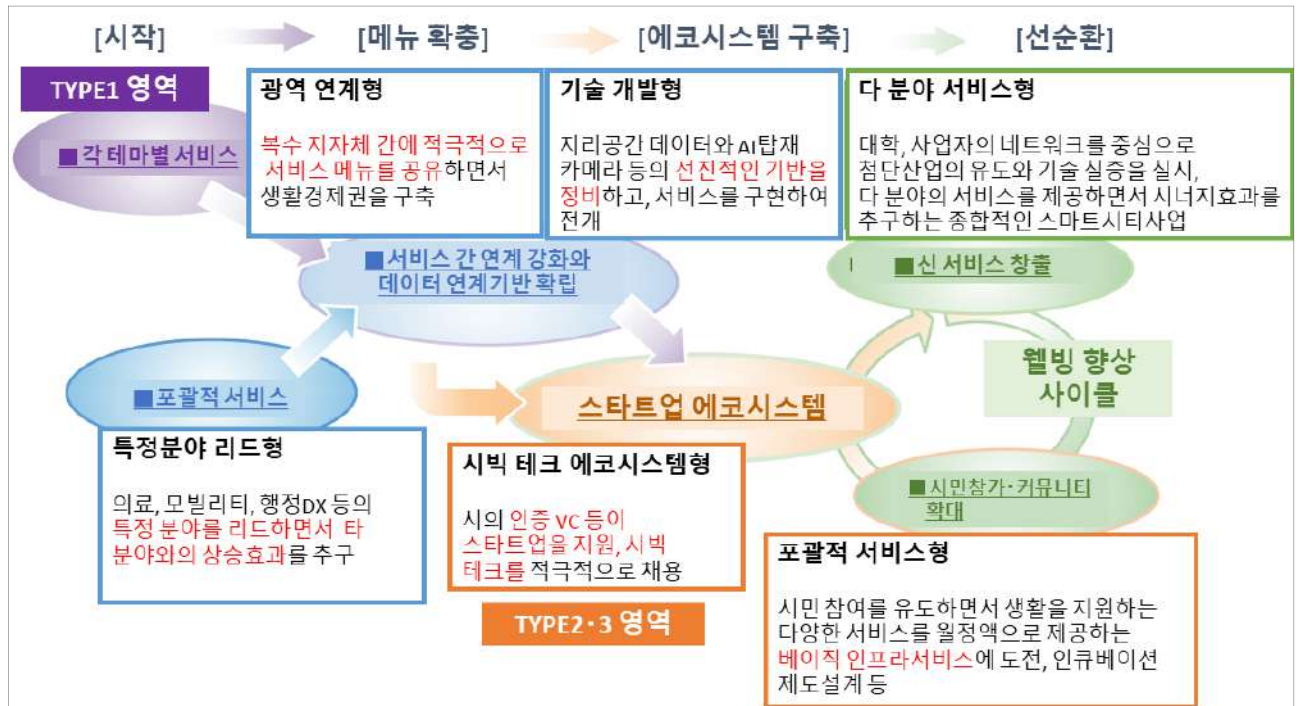
- 지역경제에 관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증거에 근거한 정책 기획입안(EBPM : Evidence-based policy making) 추진
- 구상을 실현하는데 투입되는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중요업적 평가지표(KPI : Key Performance Indicator) 설정
- 「Digi고시엔(田甲子園)」을 개최하여 제도 참여 유인 구조 형성
- 우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와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여 내각총리대신상, 실장(実装)부문(①지정도시·중핵시·시행시, 특례시, ②시, ③정·촌, ④아이디어 부문) 표창

[Digi고시엔]



출처 : 内閣官房(2022), 38

[디지털전원도시 실증구상 추진 교부금 지급을 위한 디지털 실증 타입]



출처 : 内閣府 地方創成推進室·デジタル庁(2022), p.8을 참고한 최해욱(2022).P. 32.

단계별 성숙도를 고려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관련 정책추진

-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디지털시대의 전환 모델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
- 충청남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일본의 성숙도별 유형 구분을 통한 교부금 지급 관련 사례를 참고할 필요
- 디지털구상을 실현하는데 투입되는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중요업적 평가지표의 명확한 목표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성과관리 설계
- 충청남도와 관련 행정부서의 업무추진에 있어 성숙도별 유형 구분뿐만 아니라 성숙도 평가를 위한 공통요건 존재(공조, 디지털원칙, 개방기반)에 대한 제도 수립 등 미시적인 작동기제 설계 필요

최해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- ✓ 지역 주민들이 저밀도·분산 거주하는 농촌의 정주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적 서비스를 자율적·창의적으로 전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
- ✓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, 지역 거주 및 도시 청년이 참여하여 시행하도록 상담, 연수, 인건비 등 지원
- ✓ 농촌재생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활동가 및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전문교육과정 운영